

#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주도민의 남북한 관계 이해와 통일 의식

변 중 헌\*

## 목 차

- I. 머리말
- II. 남북한 관계 및 통일 관련 의식조사 선행연구
- III.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통일 의식 조사의 의의
- IV.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 의식
- V. 맺는말

## I. 머리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5주년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올 해가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으리란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성과를 이룩해 왔다. 이러한 변화와 성과는 과거 냉전체제하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완전히 해체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남북한의 화해 협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낙관적 전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2002년 시작된 제2차 북한핵 위기가 올 해들어 증폭되면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외교적 접근과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 제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고려해 볼 때, 올 해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중대한 두갈래치기 시점(bifurcation point)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주변국들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남북한 관계 및 통일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향후 남북한 관계의 방향이나 진로 설정 등 우리의 미래 설계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는 지난 1월 27일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지향은 제주가 지닌 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산·정착시킴으로써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구축과 증진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미래 비전과도 일치하는 매우 중대한 인식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1991년 고르바초프의 방문으로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제주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정상들의 정상외교 무대로서 그리고 국제정치 차원의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북한 국방장관회담 등 남북한 대화 및 화해 협력의 무대로서 동북아 평화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한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사랑의 감귤보내기 운동과 3차에 걸친 제주도민의 방북 등을 통해 활발한 대북지원과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1세기 제주 사회가 지향하는 세계 평화의 섬 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 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 사회가 남북한 교류 협력 및 통일,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궁구하고 모색해 보는 작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그 일환으로 2000년 이후 남북한의 화해 협력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제주도민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관한 의식과 태도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제주평화통일포럼에서 실시한 제주도민-전문가 통일 의식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를 기존의 조사 결과들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sup>1)</sup> 이를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주도민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관한 의식 세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1) 여기서는 변종헌·고성준·양길현·장원석·강인숙, <통일 의식 관련 제주도민 여론조사 보고서 II>, 제주평화통일포럼, 2005. 5.의 내용을 기초로 제주도민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관한 의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조사연구는 제주도민-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범주상 제주도민과 중복되거나 제주도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주도민 일반의 의식 세계와 태도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과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추진 전략 등에 관한 제주도민의 인식과 태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남북한 관계 및 통일 관련 의식조사 선행연구

6·15 남북공동선언을 전후하여 제주도민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관한 의식과 태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에 기초한 이시적 연구 결과들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의식조사 결과를 다른 조사 결과와 이시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04년에 실시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제주도민 의식조사 결과 그리고 전국적인 수준에서 행해진 몇몇 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지닌 북한 및 통일 관련 의식 세계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남북한 관계 및 통일 문제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가 반복적으로 행해졌지만 적어도 동일한 시점에서 행해진 복수의 조사가 과연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 타당성과 신뢰도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논의는 일단 접어두고, 제주 지역과 전국적 수준에서 실시된 국민 의식조사 결과 몇 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 결과의 내용을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위한 준거로 삼고자 한다.

먼저 2004년 5월에 실시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제주도 주민 의식조사 결과는 북한 및 통일 문제에 관한 제주도민 일반의 의식 세계 및 태도를 조사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sup>2)</sup> 물론 조사연구의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조사와는 다른 제주도민들의 북한 이해와 통일 의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비교 분석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와 관련된 사안, 예컨대 제주도의 방북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남북 화해 협력 사업에 대한 전망 등의 비교 분석과 이해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장원석, "제주도민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의식조사 서설", <민주평화통일과 제주도>, 제1회 제주평화통일포럼 토론회 자료, 2004.6.28.

제주도민 방북단 의견조사 결과는 방북단이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방북 행사가 통일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방북이 남북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sup>3)</sup> 2002년 5월, 2002년 12월 그리고 2003년 10월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방북과 그에 따른 방북단 의견조사(방북인원 766명중 조사대상 406명)는 북한 이해의 정도, 방북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 감귤 보내기 등 제주도의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 향후 방북 행사에 대한 의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방북단의 의견 조사 내용은 북한의 실재를 눈으로 확인한 이후의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북 사업의 취지와 그 의의에 대해 제주도민-전문가와의 의견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도민 방북단과 설문에 응한 제주도민-전문가 집단 사이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비교의 의미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한 분기별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통일, 남북교류, 북핵 문제 등 남북한 관계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라는 점에서 제주도민-전문가 의식조사와의 비교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물론 조사의 시점과 조사 대상 그리고 조사 지역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예컨대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등 북한의 핵 문제가 핵심적 이슈가 되기 이전의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조사와의 엄밀한 비교 분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과 향후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등에 관한 조사 결과의 내용은 일반 국민이 지닌 의식 세계와의 비교를 통해 제주도민-전문가들의 의식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말 한겨레 신문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5년 정세 전망을 위한 전문가 의견 심층조사는 북핵 문제와 2차 남북정상회담에

3)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도민 북한방문에 따른 방북단 의견조사”, 2002. 6: \_\_\_\_\_, “제2차 도민 북한방문에 따른 방북단 의견조사”, 2002. 12: \_\_\_\_\_, “제3차 도민 북한방문에 따른 방북단 의견조사”, 2003. 11.

4) 한국리서치, “2004년 제1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보고서”, 2004. 3: \_\_\_\_\_, “2004년 제2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보고서”, 2004. 6: \_\_\_\_\_, “2004년 제3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보고서”, 2004. 9: \_\_\_\_\_, “2004년 제4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보고서”, 2004. 12.

대한 이 분야의 원로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통일 의식 조사와의 정성적 비교 분석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sup>5)</sup> 2005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과 의제, 장소 및 6자회담에 대한 전반적 진단 그리고 핵문제 해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의 역할 등 20여 항목에 걸쳐 구체적인 의견을 구했으며, 57명 가운데 28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의 내용이 남북한 및 통일분야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6·15 선언 5주년에 즈음한 심층조사라는 점에서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들이 지난 6·15 선언 이후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의식 세계와의 비교 분석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1.12~2.2일 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등록 회원 62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제1차 사이버 설문조사는 2005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과제를 설문내용으로 하였다.<sup>6)</sup> 이는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는 2005년의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식 조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교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의 절반이상(58%)이 40대(186명)와 50대(175명)로 그 가운데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사 결과의 내용을 제주도민-전문가의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4년 7.29~8.18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네티즌 1,755명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사이버 설문조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5문항으로 되어 있다.<sup>7)</sup> 분석 결과 대다수 네티즌(81.0%)은 향후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한의 중재 역할이 향후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네티즌들의 높은 기대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 <http://ifes.kyungnam.ac.kr>의 프레스센터-언론보도-2005 한반도정세 전문가 심층분석 참조.

6) <http://www.acdpu.go.kr>의 자료실-여론조사자료 참조.

7) <http://www.acdpu.go.kr>의 자료실-여론조사자료 참조.

### Ⅲ.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통일 의식 조사의 의의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통일 의식 조사 연구는 제주도민-전문가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 문제 등에 관한 의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제작한 후 우편에 의한 조사(mail survey)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0개 문항으로, 설문의 형식은 객관식 8개 문항과 자유응답식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항목은 북한에 대한 이해와 전망(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 체제의 변화), 남북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남북한 및 국제관계 현안(북한핵 문제, 6자회담 재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 제주도의 대북 교류 협력(남북 화해 협력방안, 도민방북사업) 등 10개 항목을 채택하였다.<sup>8)</sup>

남북한 및 통일 관련 제주도민-전문가 집단은 제주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남북한 관계 현안이나 통일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비판적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 및 통일 관련 제주도민-전문가 그룹으로 분류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제주평화통일포럼 회원, 제주통일연대 회원, 제주도윤리교육과연구회 회원 등 4개 단체 회원과 제주도의 방북사업에 참여했던 3차례의 방북 도민 등 총 1,100명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그 가운데 241명의 응답을 받았다. 회수율은 21.90%이다. 물론 이 밖에도 더 많은 통일문제 전문가와 전문가 집단이 있을 수 있으나 효율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 상기한 5개 집단의 회원들을 표집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점에서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통일 의식 조사 결과의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주도민-전문가 집단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의식과 태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2005년 조사 결과에 나타난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2004년 실시된 제주도민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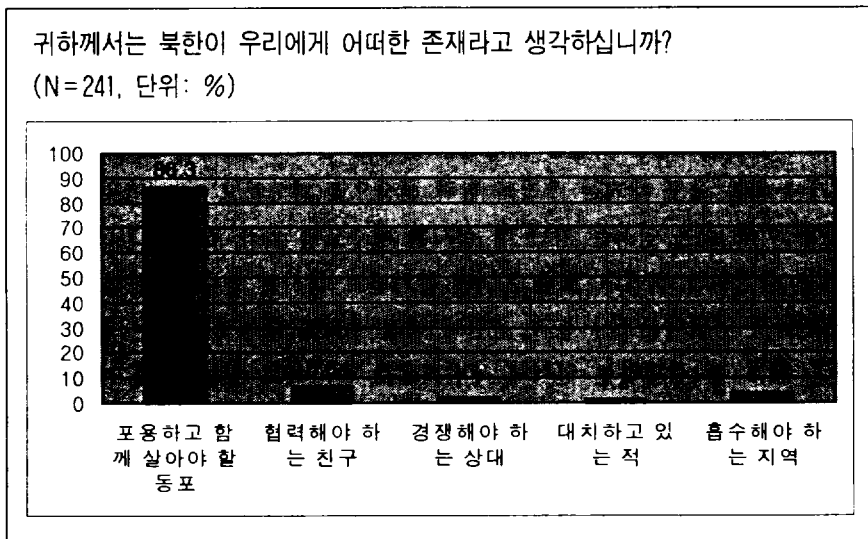
8) 2005년 5월 실시한 제주도민-전문가 통일 의식 조사에서는 10개 항목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여기서는 6자회담의 재개조건에 관한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도민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 의식을 살펴보았다. 2005년 7월말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재개되면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현 시점에서 의미가 퇴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 및 제주도민 방북단 의견조사 등과는 일정 정도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모집단의 구성 및 질문 내용과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엄밀한 비교 분석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통일 의식 조사는 전국적 수준의 국민 의식조사, 인터넷을 이용한 의식조사, 그리고 전문가 대상의 심층조사 등에서 나타난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6·15 선언 이후 제주도민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 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유용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 의식

##### 1. 북한에 대한 이해와 전망

###### 1) 북한에 대한 인식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주평화통일포럼 회원, 제주통일연대 회원.

제주도윤리교육과연구회 회원, 3차례의 방북 도민 등(이하 제주도민-전문가로 칭함)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86.3%는 북한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동포로 보았으며, 그 다음이 협력해야 하는 친구(6.6%), 흡수해야 하는 지역(4.1%), 경쟁해야 하는 상대(1.7%), 대치하고 있는 적(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5월 실시한 제주도민 의식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북한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동포나 협력해야 하는 친구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작년 평균보다 더 높았고(2004년: 60.4%, 2005년: 92.9%),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경쟁상대, 적, 흡수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크게 낮았다(2004년: 39.6%, 2005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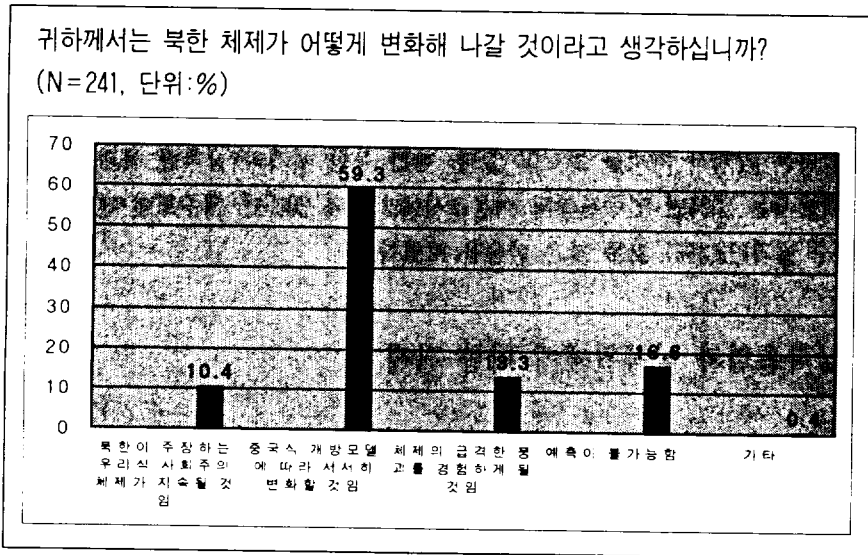
한편 2004년 6월, 9월, 12월에 각각 실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N=1,000)에 따르면, 2004년 2차 조사(6월) 이후 북한에 대해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적이자 포용하고 함께 할 상대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조사(6월)	3차조사(9월)	4차조사(12월)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동포	65.3%	58.4%	34.5%
적이자 포용하고 함께 할 상대	27.6%	34.1%	50.1%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적	5.6%	5.5%	9.1%

제주도민-전문가들은 북한을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포 내지는 우리의 협력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92.9%). 북한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지난 해 실시된 제주도민 의식 조사 결과(60.4%)보다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또한 2004년 분기별로 실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북한에 대해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적이자 포용하고 함께 살 상대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북한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민의 이와 같은 북한관은 지리적 격리에 따른 여유와 관용 이외에도 그 동안 제주도가 추진해 온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상당 부분 해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 대상이 3차례의 방북단을 포함한 제주도민-전문가라는 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 2)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한 인식



제주도민-전문가의 59.3%는 북한 체제가 향후 중국식 개방모델에 따라 서서히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13.3%),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될 것이다(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16.6%)고 보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04년 제4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2004. 12. 20/ N=1,000)에 따르면, 김정일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붕괴될 것이라는 응답이 58.2%로 가장 높고, 이어서 체제 변화를 통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33.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까운 시기에 붕괴될 것이라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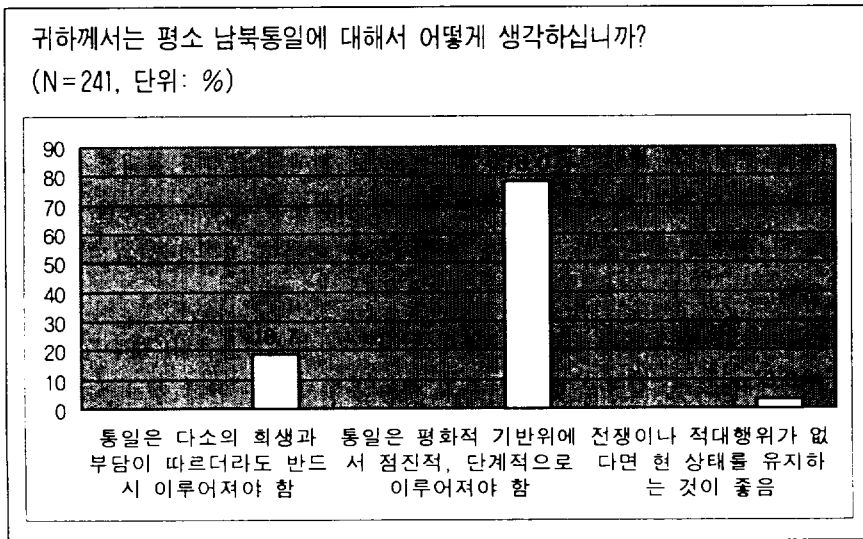
이를 볼 때, 북한 김정일 정권이 가까운 시기에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붕괴되거나 체제 변화를 통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능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63.4%) 다소 시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개혁 개방 등 체제 변화를 통해 당분간은 계속해서 체제를 유지해 나

갈 것(33.9%)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의 내용과 선택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04년 여론조사 결과와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의식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붕괴하기보다는 중국식 모델에 따른 개방을 통해 변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2004년 민주평통의 여론조사(5.2%)와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조사연구 결과(13.3%) 모두 낮은 반응을 보였다.

## 2. 남북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

### 1)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제주도민-전문가의 78%는 남북통일이 평화적 기반위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통일은 다소의 희생과 부담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18.7%), 전쟁이나 적대 행위만 없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3.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6월, 9월, 12월에 각각 실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일반국민 통일 여론조사(N=1,000)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부분(90% 정도)은 통일에 대한 방식으로 평화 공존을 통한 점진적 통일과 좋은 관계 유지를 통한 남북한 공존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2004년 5월 실시한 제주도민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점진적 통일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2004년: 42.2%, 2005년: 78%), 다소의 희생과 부담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2005년: 18.7%)와 가능한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2004년: 22.5%)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나 적대 행위가 없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작년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2004년: 34.7%, 2005년: 3.3%). 이러한 차이는 제주도민-전문가 집단의 확고한 통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쟁이나 적대 행위가 없는 분단 상태의 유지에 관한 2004년의 제주도민 조사 결과와 2005년의 제주도민-전문가 조사 결과의 편차인 31.4%가 점진적 통일에 대한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체제의 향후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제주도민-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급격하게 붕괴하기 보다는 중국식 개방모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평화적 기반위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선호하고 있다. 2004년의 제주도민 의식조사 결과 및 200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제주도민-전문가들은 현 상태의 유지를 지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점진적 통일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제주도민-전문가들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 개방에 기초한 통일 환경의 조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통일이상주의가 수반할 수 있는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남북통일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경제적 후진성 극복과 점진적 개방 개혁이 남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감안한 결과로 보여진다.

분단 상태보다는 남북한 통일이 파레토 우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때,<sup>9)</sup>

분단에서 통일로의 전환은 시간과 대가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전환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물질적 복지의 악화를 감수하게 한다. 2005년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제주도민-전문가들은 이러한 전환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적 대안으로 북한 사회의 점진적 변화와 평화적 기반위에서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주도민-전문가들 의식조사 결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 2)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과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할 일(복수 응답 가능)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	38.62%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지원	20.68%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	0.65%
군사력 강화와 경제력의 신장	0.58%
북한의 변화 유도	0.48%
한반도 평화정착과 상호신뢰구축	0.41%
국제관계의 호의적 여건조성	0.37%
기 타	

제주도민-전문가들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일차적 과제로 남북한 교류 협력의 확대를 꼽았다(38.62%). 경제 및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의 활발한 교류 증진과 남북한 대화의 지속적 확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이 경제 및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대북지원(20.68%),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0.65%), 군사력 강화와 경제력의 신장(0.58%), 북한의 변화유도(0.48%), 한반도 평화정착과 상호신뢰구축(0.41%), 국제관계의 호의적 여건 조성(0.3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경제 및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대북 지원을 중요 과제로 제시한 응답자 가운데 18.33%는 대북 지원이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05년 제1차 사이버 설문조사 결과(2005.1.12.-2.2/

9) 이용필외, <남북한 통합론: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인간사랑, 1992, p. 80.

N=622)에 따르면, 네티즌의 대다수(73.8%)는 2005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광복 60주년 및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등을 통해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37%)를 우선과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대화 추진(27.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네티즌들은 우선적으로 경제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교류 협력의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당국간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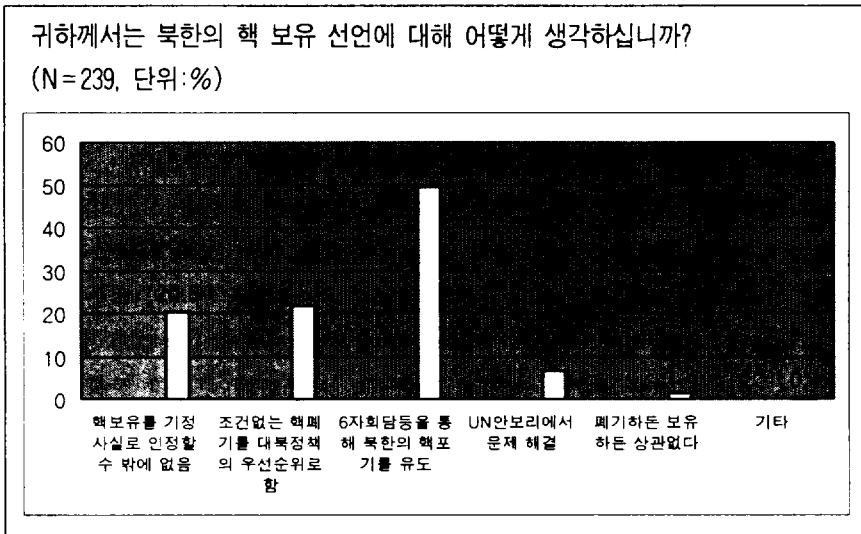
또한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에는 13.3%의 네티즌이 관심을 보였고, 북핵문제 해결 노력(12.4%)과 인도적 지원 확대(10.1%)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기 이전의 설문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가 핵심적 사안으로 부상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04년 제3차 사이버 설문조사 결과(2004.7.29-8.18/ N=1,755)에 따르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의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남북 경제협력 등 교류 협력의 확대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네티즌의 43.1%는 정상회담 개최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의제로 남북 경제협력 등 교류 협력의 확대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이 북한 핵문제(25.4%), 정상회담 정례화(15.8%), 이산가족 상봉 상설화(1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감한 정치적 군사적 이슈보다는 경제 이슈가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무난하다고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남북간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경우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그 결과 남북간 대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기대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전문가들은 향후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키고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남북교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상호교류의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가 남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반영한 것으로서, 2004년과 2005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각각 실시한 2차례 사이버 설문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반응이다.

### 3. 남북한 및 국제관계 현안

#### 1)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인식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제주도민-전문가의 49.4%는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없는 핵폐기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한다(21.8%),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20.5%), UN 안보리에서 문제를 해결한다(6.7%), 폐기하든 보유하든 상관없다(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2004년도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5.17-6.25/ 전국20세 이상 남녀 1,200명, 국방 안보전문가 63명 대상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58.8%),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지원을 더 얻으려고(14.3%) 등의 순으로, 일반 국민은 국가적 힘을 보유하기 위해(37.2%),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32.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전문가(87.3%)와 일반 국민(80.2%) 모두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우리 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sup>10)</sup>

한겨레 신문은 2004년 12월 초부터 중순에 걸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2005년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두 가지 과제로 북한 핵 문제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설문에 응답한 28명의 전문가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북핵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서 대부분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핵 문제 해결의 선후관계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른바 '입구론'과, 북핵 문제를 해결한 뒤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출구론'이 엇갈렸다.

출구론 쪽의 입장은 1)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2) 북한이 핵문제를 북-미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며, 3) 미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핵 문제의 선결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입구론 쪽의 입장은 1) 북핵 문제 해결은 긴 시간을 요구하고, 2) 해결이란 개념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3) 남북의 주체적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등의 근거를 이유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우선시하고 있다.<sup>11)</sup>

제주도민-전문가들의 경우, 각기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하고는 있지만, 상당수(71.2%)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 내지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본래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sup>12)</sup>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우리 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UN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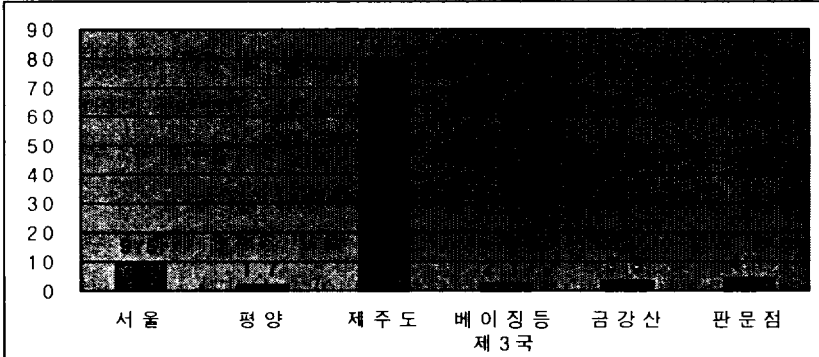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4/4분기 통일여론조사 리뷰", <통일논의 리뷰> 통권 제 12호, 2004년 4/4분기, p. 194.

11) 한겨레 신문, 2004년 12월 31일.

12)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다.

## 2)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지

귀하께서는 2005년 해방 60주년을 맞이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어디서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N=241, 단위:%)



제주도민-전문가의 79.3%는 제주도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최적지로 꼽았다. 다음은 서울(9.5%), 판문점(4.1%), 금강산(3.3%), 베이징 등 제3국(2.1%), 평양(1.7%)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말 한겨레 신문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 전문가들 대부분은 서울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국내 정치 상황이나 경호 문제를 고려해 제주도가 대안일 수 있으며, 남북경협을 상징인 금강산이나 개성도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중국 등 제3국도 후보지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의 장소 문제로 논의가 길어지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장소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며, 수도로서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끄는 데도 최적의 조건을 지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평양 상호교환방문의 틀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서울이 최적지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서울 개최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시민사회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바,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보안, 경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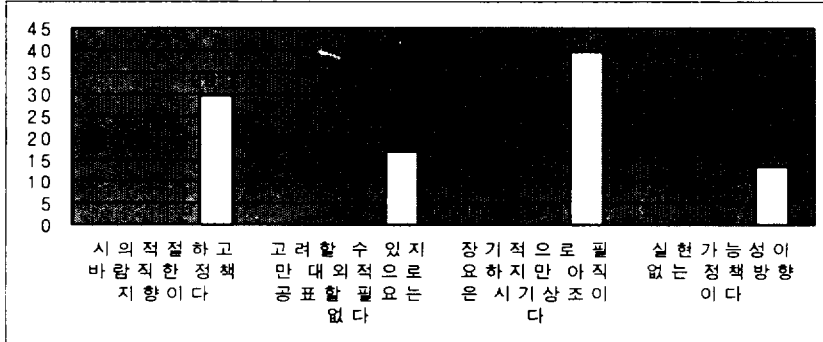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에서 볼 때 서울을 최선의 장소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주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장소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2.85%).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28명 가운데 12명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제주 개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제주 개최 혹은 서울이 어려울 경우 차선으로 제주 선택)을 피력하였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구호에 담긴 상징성, 그동안 있었던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상급 외교 무대로서의 긍정적 평가, 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미지 등이 제주 개최를 선호하는 이유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항공편 이용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북측이 안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제주 개최에 우려를 표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최적지로 79.3%의 응답자가 제주를 꼽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민-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는 점 이외에도 그 동안 제주도가 축적해 온 정상외교의 산실, 평화의 섬 이미지에 대한 제주 사회의 자신감과 기대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기대감의 표현은 한겨레 신문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답방에 대한 의미 부여의 측면에서 서울을 최적의 장소로 보는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제주도를 서울 이외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3)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한 인식

제주도민-전문가의 39.7%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다음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지향이다(29.7%), 고려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는 없다(17.2%),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 방향이다(13.4%)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239, 단위: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이민규 교수팀과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2005년 4월 6일부터 11일까지 17대 국회의원 2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해서는 발표 시기나 방법, 내용 등을 포함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56.1%에 달했다. 이는 청와대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4.4%였던 것에 비해 국회의원들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인 셈이다.<sup>13)</sup>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나 시의가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29.8%였고, 검토는 가능하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16.3%였다.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애초부터 부적절한 문제 제기였다는 응답은 10%였다. 반면에 89명(42.8%)의 의원은 시의 적절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실이 4월 7일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해 응답자의 14.7%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60.0%가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각각 답해 호의적인 반응이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나아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의 현실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계는 있지만 나름의 여지도 있다, 가능한 일이라는 응답은 각각 68.0%, 10.7%로 조사된 반면, 거의 현실성이 없

13) 동아일보, 2005년 4월 12일; 한국일보, 2005년 4월 10일.

다는 응답은 20.2%에 머물렀다.

또한 4월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전체의 69.5%, 57.8%가 각각 공감한다. 실현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동북아 균형자론이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0.3%에 그친 반면에, 38.3%와 26.6%가 각각 별 영향이 없을 것, 긍정적이라고 답해 대조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일부 지식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국민들은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17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56.1%)와 비교할 때도 제주도민-전문가들(70.1%)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답과 고려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10%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의 발표 시기나 방법, 내용 등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 4. 제주도의 대북교류 사업

##### 1)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제주도의 기여사업

제주도가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대북지원사업(감귤, 농특산물, 의료, 건설 및 기술 등)	37.34%
남북교류사업(인적, 문화·관광, 스포츠, 학술분야)	34.02%
정상회의 등 회의장소 제공	0.53%
세계 평화의 섬 관련 사업	0.29%
기 타	

제주도가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민-전문가의 37.34%는 각종 대북지원사업(감귤보내기, 농특산물 지원, 의료·건설 및 각종 기술지원)을 첫째로 꼽았다. 다음이 인적교류, 문화·관광 스포츠 교류, 학술교류 등의 교류사업(34.02%), 정상회의 등 남북한 관계자의 회의 장소 제공

(0.53%), 세계 평화의 섬 사업(0.2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감귤보내기가 전체 응답의 29.87%를 차지하고 있고, 대북지원 사업 내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감귤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제주도민-전문가들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남북한 화해 협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주도의 특화 전략 사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04년 5월 실시한 제주도민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68.8%가 감귤보내기 운동이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였다(크게 기여하였다+ 약간 기여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기여하지 못했다(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30.2%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감귤보내기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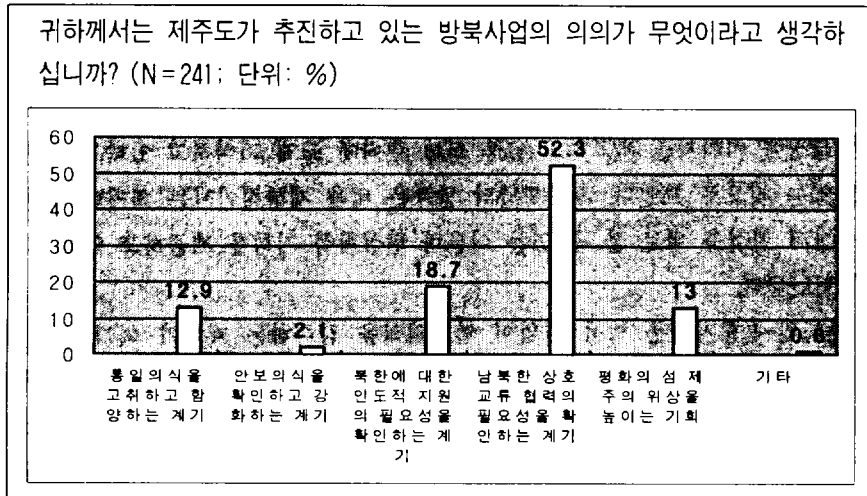
제주도민-전문가는 남북한 화해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대북 지원사업과 적극적인 교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앞으로 감귤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동시에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분야나 사업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한 평화 및 세계 평화 등을 논의하는 정상외교나 공론의 장 내지는 세계 평화의 섬 관련 사업이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 평화의 섬 추진 전략 및 취지 등에 관한 홍보와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 이외에도 제주 평화의 섬 추진 사업이 남북한 화해 협력과 관계 개선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 평화의 섬 추진 사업을 남북 화해 협력 및 통일을 위한 노력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제주도 방북사업에 대한 인식

제주도의 방북사업에 대해 제주도민-전문가의 52.3%는 남북한 상호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다음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회(18.7%),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

(13.3%), 통일 의식을 고취하고 함양하는 계기(12.9%), 안보의식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2.1%)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 북한방문에 따른 방북단 의견조사(2002.5.30/N=169)에 따르면, 북한 방문이 북한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며(95.9%), 방북 행사가 통일 운동에 도움이 되고(95.3%), 남북화해 협력에 도움이 되는(83.4%)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귤 당근 보내기 운동 등 제주도민의 남북 화해 협력 운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가 82.8%, 감귤 당근 보내기 운동에 국한되어야 한다가 14.2%로 나타났다.

제2차 도민 북한방문에 따른 방북단 의견조사(2002.12.25/N=118)에 따르면, 북한 방문이 북한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며(99%), 방북 행사가 통일 운동에 도움이 되고 (96%), 남북화해 협력에 도움이 되는(94%)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귤 당근 보내기 운동 등 제주도민의 남북 화해 협력 운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가 82%, 감귤 당근 보내기 운동에 국한되어야 한다가 15%로 나타났다.

제3차 도민 북한방문에 따른 방북단 의견조사(2003.10.13/N=119)에 따르면, 북한 방문이 북한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며(98%), 방북 행사가 통일 운동에 도움이 되고(92%), 남북화해 협력에 도움이 되는(92%)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귤 당근 보내기 운동 등 제주도민의 남북 화해 협력 운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가 75%, 감귤 당근 보내기 운동에 국한되어야 한다가 20%로 나타났다.

제주도민-전문가 집단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북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에 걸친 제주도민 방북단 의견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주도민-전문가는 제주도의 방북사업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남북 화해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의 방북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실상과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른바 현상학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민-전문가들은 방북 사업이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응답자의 13.3%가 제주도의 방북사업이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라고 답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방북사업을 제주 평화의 섬 추진전략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방북 사업의 지속 및 확대는 제주도민-전문가 집단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포 그리고 우리의 협력 내지 지원 대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V. 맺는말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통일 의식 조사는 기존의 선행 조사 연구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주 사회가 지닌 남북한 관계 및 통일 의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물론 제주를 포함한 전국적인 수준에서 동시에 진행된 의식조사 결과를 기초로 제주도민-전문가 집단이 지닌 남북한 관계 및 통일 의식의 특징과 상대적 차이를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일련의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제주도민-전문가들이 지닌 남북한 및 통일 관련 의식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제주도민-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때 북한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화적 기반위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제재가 아닌 6자회담 등을 통한 평화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 및 양자 협상이나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민-전문가들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과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도민-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라는 점 이외에도 감귤 당근 보내기 운동이나 제주도민 방북 사업 등이 남북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통일에의 의지를 함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귤 지원사업에 집중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이를 제주 평화의 섬 추진 전략과 연계시킴으로 평화의 섬 제주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의 핵심적 동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제주도민-전문가 통일 의식 조사는 동일한 조사 대상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비교 분석의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북한 및 통일 문제 등과 관련된 몇몇 주제들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를 기존에 행해진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제주도민-전문가들이 지닌 의식 세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은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질문 내용을 보완하여 정기적인 조사가 행해지고 그 결과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관계 및 통일 문제에 관한 제주도민-전문가 나아가 제주 사회 전반의 의식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성준 외,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2004.
-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제2차 도민 북한방문에 따른 방북단 의견조사”, 2002. 12.
-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제2차 도민 북한방문에 따른 방북단 의견조사”, 2003. 11.
-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도민 북한방문에 따른 방북단 의견조사”, 2002. 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4/4분기 통일여론조사 리뷰”, <통일논의 리뷰> 통권 제12호, 2004년 4/4분기.
- 변종헌 외, <통일 의식 관련 제주도민 여론조사 보고서Ⅱ>, 제주평화통일포럼, 2005. 5.
- 이용필 외, <남북한 통합론: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인간사랑, 1992.
- 장원석, “제주도민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의식조사 서설”, <민주평화통일과 제주도>, 제1회 제주평화통일포럼 토론회 자료, 2004.6.28.
- 통일교육원, <2005 통일문제이해>, 2005.
- 한국리서치, “2004년 제1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보고서”, 2004. 3.
- 한국리서치, “2004년 제2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보고서”, 2004. 6.
- 한국리서치, “2004년 제3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보고서”, 2004. 9.
- 한국리서치, “2004년 제4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보고서”, 2004. 12.
- 동아일보, 2005년 4월 12일.
- 한겨레신문, 2004년 12월 31일.
- 한국일보, 2005년 4월 10일.
- <http://ifes.kyungnam.ac.kr>
- <http://www.acdpu.go.kr>